Asia-Pacific Journal of Business & Commerce (2019) 11(3), 126-156
https://doi.org/10.35183/ajbc.2019.11.11.3.126

한국경제 저성장 함정과 구조적 요인 -중진국함정 주요 발생 요인과 비교를 중심으로-*

김의동**
경상대학교 경영대학 국제통상학과 교수

Received 19 June 2019; Revised 23 July 2019; Accepted 20 September 2019

요 약

본 논문에서는 선행 문헌연구를 통해 중진국함정과 저성장의 주요 발생요인들을 우선 추출한 뒤에 이들 요인들을 한국경제 현실에 적용하여 한국 구조적 저성장이 중진국함정 발생의 주요 요인들에 어느 정도 맞물려 있는지 여부를 우선 확인해 보려 하였다. 그런 다음 향후 저성장 함정에서 벗어나기 위해 한국이 어떤 경제개혁을 추진해야 하는지에 대해 살펴보는 것을 중요한 과제로 삼고 있다. 중진국함정 유발 요인에 대한 선행 연구 검토 후 추출한 6가지 핵심 요인을 준거로 삼아 한국 경제에 대응시켜 본 결과, 한국경제도 중진국 함정의 주요 발생요인들로 인해 구조적 저성장에 빠져 있으며 중대한 전환점에 서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구체적으로는 총요소생산성 지속감소, 인구보너스 소멸과 고령화, 부채주도적 경제성장의 제약, 소득불균등 확대, 기업구조조정 지연 및 디지털자본 및 산업혁신의 지연, 규제장벽 및 투명성 지수 등 사회적 자본 축적 미비 등의 중진국 함정 발생 핵심요소들 모두가 한국 경제성장과 발전에 큰 장애요인으로 등장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런데 이들 위기 신호들은 모두 지금까지 한국이 추진해 온 성장모델, 즉 요소투입형 성장과 정부주도 성장모델의 한계를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정부실패 교정을 필요로 하는 것들임을 또한 확인할 수 있었다. 저성장 함정을 피하기 위한 한국 정부의 '포용-공정-혁신'이라는 정책기조는 제대로 설정된 상태이지만 이행과정이 쉽지 않다는 증거가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었다. 결국 지금까지의 각종 정부 실패를 수정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혁신에만 매달려서는 명확한 한계에 봉착할 수 있다. 따라서 어떻게든 규제혁신 및 산업혁신을 통해 미래 성장동력을 새롭게 구축하는 한편 시장의 자체적인 상시 구조조정 능력이 배양될 수 있는 틀을 만들어 내는 것이 한국경제 미래를 위해 더 없이 중요한 요소임을 알 수 있었다.

핵심주제어 : 중진국 함정, 한국 장기 저성장, 총요소생산성, 인구보너스, 부채주도 성장, 소득불평등 심화, 디지털 자본 및 산업혁신, 규제장벽, 투명성 지수

JEL: E0

---

* 본 논문은 한국연구재단과 아태경상저널에서 정한 윤리규정을 준수함

** 교신저자 : 김의동, edkim@gnu.ac.kr

ⓒ 2019 Research Institute of Industry and Economy

Comparative Analysis on Secular Stagnation of the Korea Economy and the Middle - Income Trap Controversy*

Euidong Kim**

Professor, Department of International Trade, Gyeongsang National University

Received 19 June 2019; Revised 23 July 2019; Accepted 20 September 2019

Abstract

This paper first extracts the main basis for the Middle-Income Trap(MIT) to apply these grounds to Secular Stagnation reality of the Korea economy. And then confirmed crisis factors of Korea economy. Also discussed then the economic reforms of Korea in order to escape from the MIT. After reviewing previous research extracted six factors the results will correspond to comply with the Korea economy. Those are 'continuous reduction of TFP' 'disappearance and the aging of the population bonus', 'excessive debt and structural adjustment and financial instability of the company', 'income unequal expansion', 'low competitiveness of financial and digital industry, future growth industry', and 'high regulation and low transparency index'. Korea's policy direction to avoid the MIT generally set properly, but proof that implementation process not easy, was appearing everywhere. After all, Korea economy should be transformed now to a reforms of 'government failure' and promotion of function for ongoing restructuring system in the market. It is inevitable to face major constraints and uncertainties to develop the structural transformation in both the internal and the external aspects.

Keyword : Middle-income trap, Secular Stagnation, TFP, Population bonus, Debt dependency growth, Income unequality, Future growth industrie, Regulation and transparency index

JEL: E0

* This paper complies with the ethical codes set by NRA and AJBC

** Corresponding Author : Kim Euidong, edkim@gnu.ac.kr

ⓒ 2019 Research Institute of Industry and Economy

1. 연구 목적과 필요성

한국 1인당 국민소득(GNI)이 2006년 2만 달러대를 상회한 이후 12년 만인 2018년 말 드디어 3만 달러(3만1,349 달러)를 넘어섰다[1]. 하지만 2012년 이후 2018년까지 한국경제는 7년간 한 번도 세계경제성장률을 상회한 적이 없이 평균 2.8% 대 저성장 추세를 보이면서 미래 잠재성장률도 지속적인 하락이 예상되는 역설적 상황을 맞이하고 있다. 이 때문에 한국경제의 중진국함정 여부에 대한 논의와 비관적 논의들이 지속되어 왔다. 그렇지만 국민소득 3만 달러를 상회한 한국경제에 중진국함정 논리를 적용하는 것은 부적절한 시도로 간주되었다. 그 대신 저성장 함정(터널), 구조적 저성장 등의 용어로 대체되어 논란이 진행되어 왔다.

이런 논의 배경에는 한국경제가 선진국에 제대로 진입하기도 전에 L자 형 저성장함정에 장기간 정체될 경우 각종 경제성장 후유증과 구조적 위기요인들이 겹쳐지면서 경제 기본체력이 저하되고 경제 역동성이 지속적으로 약화되면서 점차 중진국 함정에 오랫동안 빠져버릴 수 있다는 우려가 깔려있다.

이런 맥락에서 무엇보다 한국경제 저성장 국면이 지속되는 추이와 원인이 본질적으로 무엇이며 이를 토대로 저성장 탈출을 위해 어떤 대응이 필요한지를 강구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로 부상했다. 이 글에서는 한국경제 저성장 위기가 중진국 함정론에서 적시하는 주요 위기 요인들과 무관한 것인지 아니면 여전히 중진국함정론의 주된 요인들에 붙잡혀 있는 건지 여부를 정리·검토해보고자 한다. 물론 이런 연구 동기는 최종적으로는 한국경제 저성장의 구조적 요인을 분석하고 그 처방책을 강구해보려는 시도와 연결돼 있다.

이를 위해 Ⅱ장에서는 우선 중진국함정론 혹은 저성장 함정 논의와 관련된 선행 문헌 연구를 통해 중진국함정과 저성장 함정 주요근거가 무엇인지를 추출해볼 것이다. 그런 다음 세계경제성장률과 한국경제성장률 수렴과정 등을 살펴보면서 한국경제에서 저성장이 시작된 시점과 계기를 우선 살펴볼 것이다.

Ⅲ장에서는 기존 문헌 연구 자료들을 통해 한국경제 성장지체 요인들을 소위 중진국함정론에서 지목하는 요인들과 상호비교 하면서 한국이 고소득·중진국 함정[2]에 빠져 있는 것은 아닌지 검토해 볼 것이다. Ⅳ장에서는 중진국 함정 혹은 저성장 함정으로

1) 2018년 기준으로 1인당 GNI가 3만 달러를 넘는 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에서도 23개국밖에 없다. 한국 1인당 국민소득은 1963년 100달러를 넘었고, 1977년 1000달러, 1994년 1만 달러, 2006년 2만 달러를 돌파했다

2) 세계은행 공식 기준(http://data.worldbank.org/about/country-and-lending-groups)으로 중진국 함정 정의는 1인당 GNI가 1,046-1만 2,745 달러 사이에서 더 성장하지 못하고 정체하고 있어 고소득 국가(High income country)에 진입하기 전 성장 동력을 상실한 국가를 뜻한다. 하지만 지속 성장을 고려할 경우 이 소득 범주 기준은 좀 더 높아져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실제로 현대경제연구원(김동열 외: 2015)은 정확한 범주 정의 없이 한국경제 현실을 3만 및 4만 달러 대에 선진국들과 비교하면서 중진국함정 탈출 대응책을 논의하고 있기도 하다.

ⓒ 2019 Research Institute of Industry and Economy

부터 벗어나기 위한 대응책에 대해 검토해 보려한다. Ⅴ장에서는 전체논의를 간단히 요약하고 시사점을 도출해보려 한다.

2. 선행연구 검토 및 한국경제 저성장 추이와 특징

2.1. 중진국함정과 저성장 관련 선행연구 검토

우선 중진국함정론에 근거한 저성장 주요인에 관한 기존 논의를 개관해 보면 대체로 두 방향의 연구로 압축된다. 하나는 신고전파적 시각(물적 자본-인적자본 축적 및 기술-생산성 증대 등에 초점을 맞춘) 하에서 주요 경제지표 등을 통해 특정국가 저성장 함정 추세와 원인을 살펴보는 단순 비교 연구이다. 다른 하나는 신고전파에서 외생변수로 간주하고 있는 제도적 측면과 기타 요인들을 강조하여[3] 특정 국가가 저성장 함정에 갇혀 있는 지 여부나 그 원인을 더욱 상세하게 검토하는 연구로 대별할 수 있다.

대표적인 단순 비교 연구로 World Bank(2012)를 들 수 있는데, 이 연구에서는 1960년 101개 중소득 국가 중 2008년까지 단지 13개 국가 만[4]이 고소득 국가로 편입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 밖의 단순비교 연구로 Eichengreen et al.(2012)에서는 2005년 경상 국제ppp가격으로 일인당 소득 10,000달러 이상 국가를 대상으로 성장률 조사를 수행한 결과 15,000달러 대에서 전형적인 성장지체가 일어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그 대표적 원인으로 생산성 정체, 즉 총요소생산성(TFP) 감소가 86%의 압도적 설명요인으로 지적된 바 있다. 이외에도 Agenor& Alpaslan(2014)나 Daude(2010) 등도 저성장 함정 근거로 자본 한계생산성 체감이나 투자효율성 저하를 강조하고 있다.

Felipe et al.(2012)은 상이한 접근을 통해 2010년 기준 52개 중진국 중 35개 국가가 중진국 함정에 빠져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우선 소득 군을 저소득 군, 하위 중소득군, 상위 중소득군, 고소득군 4개로 구분하고 이들 표본 국가들이 각 소득 그룹에서 지내온 햇수의 median을 구하였다. 하위 중소득군은 28년, 상위 중소득군 이상의 경우 14년 이상 저성장 함정에 갇혀 있었던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밖에 Eichengreen et al.(2012), Dabla-Norris et al(2013), Agenor and Alpaslan(2014) 등은 저임 노동력 고갈과 외국기술 모방단계 종료에 따른 성장 한계를 강조하고 있다. 이들 모두는 이런 상황에서 내수를 기반으로 한 혁신주도형 성장 방식으로 성공적으로 전환하지 못할 경우 경제 생산성 증대로 이어지지 못하게 되어 결국

3) 자본축적, 기술진보, 생산성 증대, 지리적 요인 그리고 제도 모두 성장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다. Rodrik(2004) 등은 제도가 가장 큰 영향을 준다고 주장한다.

4) 일본, 홍콩, 싱가포르, 한국, 대만, 그리스, 포르투갈, 스페인, 아일랜드, 이스라엘, 적도기니, 마우리티우스, 푸에르토리코 등 임. 이 중 스페인, 그리스 등은 3만 달러를 넘어섰다가 구조개혁에 실패해 2만 달러대로 뒷걸음질 쳤을 뿐 아니라 일본도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를 달성한 시점에 '잃어버린 10년'을 겪기 시작했다.

ⓒ 2019 Research Institute of Industry and Economy

저성장 늪에 빠질 수 있음을 경고하고 있다.

Czernich et al.(2011)은 고소득 중진국 저성장 함정 근거로 지속적인 혁신과 소위 4차 산업혁명의 기반이 되는 선진화된 정보통신 인프라와 지식 네트워크를 강조한다. 이를 통해 시장창출형 혁신을 이끌어 낼 수 있는 소위 혁신 국가로의 전환을 강조하고 있다. 이는 노동투입과 생산성 향상 모두 한계 상황에 와 있을 경우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디지털 자본'에 주목하면서 '지능정보화'를 활용해 신 시장을 창출함으로써 도약 기회를 포착해야 한다는 멕킨지(2013: Jacques Bughin and James Manyika) 주장과 일맥상통하는 것이다.

Brown et al.(2012) 등은 금융서비스 산업 선진화를 고소득 중진국의 저성장 함정 탈출을 위한 중요한 대안으로 강조한다. 특히 정보기술 발전에 따른 모듈 금융서비스(Modular financial services) 기술개발과 혁신을 통해 금융산업 경쟁력을 확보함으로써 기업 혁신과 생산성 증대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음을 강조한다.

마지막으로 경제발전 초기 국면에서 급속한 성장 대가로 상징되는 소득불평등을 저성장 함정의 중요한 요인으로 지적하는 견해들이 있다. 소득불평등 심화는 낮은 소득과 자산을 보유한 개인과 그 자녀들에게서 숙련 증진과 질 높은 교육 및 계층상승 가능성을 낮추어 지속적 생산성 증대를 가로막는 원인이 되고 결국 성장률을 정체시키는 동인으로 보는 견해이다. Egawa(2013)의 연구가 대표적이라 할 수 있다. 물론 아직까지 소득불평등이 지속적 생산성 하락이나 침체와 연관되는지에 대한 공식적 증거는 별로 나타나지 않고 있는 편이다.

한국경제 저성장과 관련해서 가장 최근 분석은 주원(2016)의 성장요인 분해를 통한 한국경제 저성장 분석을 들 수 있다. 성장률 추이, 수출-내수 성장기여도, 소비와 투자의 성장기여도, 민간과 공공부문 성장률 추이, 재정지출 증대, 가계신용 증대 추이, ICT생산 증가율, 잠재성장률에 대한 생산요소 기여도 등을 살펴본 후 한국경제가 조로화 징후를 보이고 있어 저성장 함정에서 탈출이 시급하다고 제안하고 있다.

김정식(2015)은 신고전파 경제학에서 외생변수로 취급해오던 제도적 요인들을 중심으로 한국경제 저성장 원인을 분석하여 장단기 발전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그는 저성장 요인으로 저고용과 고임금구조가 고령화추세와 산업경쟁력이 약화된 경제여건 변화와 연관이 있으며 또한 연금제도와 고비용을 초래하는 각종 제도와 연관이 있음을 분석하였다.

한성우(2016)에서는 노동생산성, 제조업 평균가동률, 기업매출액, 수출액, 수출단가, 순 수출 경제성장기여도, 민간 소비, 소비자 심리지수, 국내총투자율, 핵심 생산가능인구(25-49세) 등 10대 주요 경제지표 증가율 모두가 마이너스 추세를 보이고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윤우진(2017, 산업연구원)은 생산성 침체 결과로 산업경쟁력 측면에서 중국이

 ⓒ 2019 Research Institute of Industry and Economy

1995년 20위에서 2015년 2위로 비약하는 사이에 한국은 16위에서 13위로 상승해 더 이상 기술력, 가격경쟁력 측면에서 경쟁국인 일본과 중국 대비 우위를 점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반전되어 왔다고 분석했다.

위에서 살펴본 선행연구들을 통해 고소득·중진국 함정을 유발하는 주요 원인들을 정리할 수 있었는데, 대체로 아래와 같이 정리할 수 있을 것이다. 즉 ①총요소생산성(TFP) 하락-투자효율성 저하, ②인적보너스 상실과 경쟁력 저하, ③소득불평등 심화와 경쟁력 저하 ④디지털 혁신과 생산성 증대에 따른 신 성장 동력과 시장창출능력 부진, ⑤혁신국가 제도 구축과 사회적 자본 확충 및 금융산업 혁신 지체 등이 중요한 중진국 함정론에서 강조하는 발생 요인들로 나타났다. 여기에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신흥국들의 특수 요인으로 ⑥부채의존적 경제성장의 한계에도 주목해야 할 것이다.

사실상 7년 이상 지속되는 한국경제 장기 저성장은 무엇보다 공급구조에 중대한 문제가 누적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단순한 저성장 장기화가 아니라 저성장 함정에 빠져 있는 것은 아닌지 검토해 봐야 할 일이다. 이 때문에 중진국함정 관련 선행연구에서 지적하는 위 6가지 요인들[5]이 구체적으로 한국경제 저성장의 구조적 원인으로 작동하는지 비교진단하고 만약 그렇다면 그 타개책을 서둘러 찾는 것이 시급한 과제이다.

2.2. 한국경제 저성장 추세 추이

과거 한국 경제성장률 추이를 10년 단위로 살펴보면, 1960년대(7.45%), 1970년대(8.58%), 1980년대(9.28%), 1990년대(6.33%), 2000-2010(4.07%), 2011-2018(2.83%)로 나타난다. 이는 2000년대 중반까지 세계경제성장률을 상회하던 추세에서 그 이후 세계경제 성장률에 수렴해오다 2012년 이후 세계경제성장률을 하회하는 저성장 추세로 급격히 반전되어 왔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실제로 2012년 이후에는 7년 연속 한국GDP 평균 성장률이 2.8%대(2.3-2.9-3.3-2.8-2.8-2.8-2.7)로 나타나 같은 기간 세계GDP 평균 성장률 3.3%대(3.2-3.3-3.4-3.2-3.1-3.7-3.3)를 하회하고 있다.

<표 1>한국경제 잠재성장률[6] 추이

기간	1991-1995	1996-2000	2001-2005	2006-2010	2011-2015	2016-2020
잠재성장률	7.3%	5.6%	4.7%	3.9%	3.2%	2.7%

자료: 주원·김천구(2016), pp.i-ii.

5) 일부 선행연구자료는 김의동(2016) 자료를 참조함.
6) 성장잠재력은 일반적으로 잠재(GDP)성장률이라는 개념을 이용하여 평가된다. 가장 최근 연구결과(한국은행 김도완 외, 2017.8월)에 따르면 2016~2020년 중 잠재성장률이 2.8~2.9%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 2019 Research Institute of Industry and Economy

한국 잠재성장률 지표를 보아도 유사한 현상이 드러난다. <표 1>에서 보듯이 한국 잠재성장률은 1990년대 6.5% 대에서 점차 감소하여 2016년 이후에는 2.7%대까지 낮아지고, 이후 더 낮아질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상세한 것은 주원·김천구:2016 참조). 이는 비록 한국이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에 진입하였지만 향후 경제성장 역동성이 빠르게 저하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잠재성장률 하락은 주로 노동투입 기여도 하락과 생산성 기여도가 하락한데 기인한다. 일본만 해도 1970년부터 90년대 초까지 20년 이상 중간 수준 성장기를 거치면서[7] 기술 성숙을 이뤘지만 한국은 고도성장에서 저성장 추세로 진입이 너무 빠른 것이 문제로 지적된다.

실제로 Edda Zoli(2017)는 급격한 고령화, 잠재성장률 급락, 물가상승 둔화 등을 근거로 한국경제가 일본의 잃어버린 20년 전철과 상당히 닮은 모습을 보인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8]. 특히 고성장시기에 선진국과 같은 튼튼한 연금과 복지체제를 구축해 놓지 않은 한국 경우에 저성장함정에 빠질 경우 복지수요가 폭발하면서 양극화가 심화될 뿐만 아니라 재정적자와 국가부채가 증가하게 될 것이다. 이럴 경우 비교환성 통화국가인 한국 경우 반복적인 금융위기와 외환위기 가능성도 그만큼 높아지게 된다.

따라서 기존 논의들을 통해 고소득 중진국 함정에 과연 한국이 빠져있는지 기존 연구를 근거로 공통분모를 도출해보고 상당한 연관성을 갖는다면 저성장 함정의 부작용을 막기 위한 대책 등을 살펴보는 것이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다.

3. 중진국 함정 발생 요인에 근거한 한국경제 저성장 요인 분석

3.1. 총요소생산성 하락과 저성장

김도완 외(2017)에 따르면 서브프라임 금융위기 이후 선진국 GDP와 한국GDP 격차를 발생시킨 주요인으로 총요소생산성 하락을 지목했다. 기술진보에 의한 부문과 생산효율성 변화에 의한 부문 2가지로 분해해서 살펴본 분석결과에서도 기술진보와 생산효율성이 이 기간에 모두 하락세로 반전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이들의 효율성 추정 결과 2011~2015년 5년간 한국의 평균 효율성 수준은 OECD 33개국 중 29위로 하위권에 머물렀다. 특히 금융위기를 거친 2011년 이후 한국

7) 1960년대에서 70년대 초까지 평균 약 10%대, 70년대 중반이후 90년대 초반까지 평균 약 5%대 성장률을 보였다. 90년대 중반부터 2000년대 중반까지 평균 2-3%대 성장을 보이다가 2000년대 후반부터는 1%대 중반 대를 유지하고 있다. 이런 추세를 반영하듯 국민소득 3만 달러대를 넘긴 것도 한국은 12년 (2006-2018) 걸렸으나 일본 경우 5년(87-92)이 소요된 것으로 나타난다.

8) 보고서에서는 인구보너스 소멸(한국 생산가능 인구 2017년 66.6%로 정점, 1995년 일본 63%로 정점기록), 잠재성장률 급락(한국 1991년 8%에서 2015년 2.9%로 급락, 일본 1980년대 4%대에서 2000년대 1% 이하로 급락), 생산성 둔화 추세의 유사성, 비정규직 급증과 서비스업 경쟁력 정체, 주식과 부동산 중심의 자산 버블 가능성 등을 비교 강조하고 있다.

 ⓒ 2019 Research Institute of Industry and Economy

생산성 증가세가 본격적으로 약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즉 2011년 이후 2018년까지 지속적으로 선진국과 격차를 줄이지 못하고 정체되는 양상을 보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런 추세는 한국경제가 2%대 저성장 추세로 접어드는 기간과 거의 일치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취업자 수와 물적 자본투입, 총요소생산성 등 세 가지 요소가 성장률에 기여한 정도를 분석한 권규호(2019)의 분석에서도 그대로 나타난다. 그에 따르면 총요소생산성의 한국 1인당 실질 GDP 성장기여도 추이를 보면, 1991-2000, 2001-2010, 2011-2018 기간 각각 3.2%, 2.6%, 1.2%로 나타나 2011-2018년 기간 급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조원·오영경(2019)의 노동생산성 지수 국제비교조사 결과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확인된다. 2009-2017년 기간 한국 제조업 노동생산성 지수가 연 2.8% 상승에 그친데 반해 중국, 싱가포르, 대만, 일본 등 경쟁국들 경우 각각 연 8.6%, 7.0%, 4.2%, 4.1% 씩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제조업 단위 노동비용은 한국이 연 2.2%씩 상승한데 반해 경쟁국들 경우 각각 4.2%, -2.2%, 0.2%, -4.9%로 나타났다. 중국만 한국보다 크게 상승했을 뿐 나머지 경쟁국들은 미미한 상승 혹은 감소추세를 보였다. 특히 단위노동비용이 상승해왔다는 것은 한국제조업 노동생산성보다 임금상승폭이 크다는 것을 나타낸다.

이런 추세 변화는 OECD(2016a;55)[9]에서 조사 발표한 2008년 서브프라임 금융위기 이전과 이후의 두 기간 한국 경제성장률 변화에 대한 각 투입요소별 경제성장 기여도 변화 결과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난다. 특히 그 중에서도 금융위기 이후 기간 총요소생산성이 1.87%로 이전 기간 3.42% 비해 거의 절반수준으로 하락해 이 기간 한국경제 성장률 저하를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혁신 등이 포함되는 총요소생산성 감소추세는 빠른 추종경제에서 초기 주도경제로 전환하려는 한국경제 입장에서 특히 우려할 부분이다. 이런 하향추세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의 전 세계적인 불황과 이에 따른 교역량 감소가 반영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며, 2000년대 이후 누리던 정보통신기술 부문 혁신을 이을 새로운 혁신이 아직 나타나지 않고 있는 것도 원인이 될 것으로 보인다.

요약하자면 요소투입형 한국경제는 투입요소의 생산성 제고를 통한 성장으로의 전환이 효율적으로 진행되지 못하면서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는 결국 임금상승과 생산성과의 괴리가 계속 커지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더욱 심각한 것은 총요소생산성 하락이 2017년 이후 본격화될 인구보너스 약화요인, 높은 수준의 경제 규제 등 비효율적인 경제구조와 겹쳐질 경우이다.

9) 미국 서브프라임 위기 이전(2001-2007)과 이후(2019-2014)로 나누어 성장회계기법(growth accounting)을 활용하여 회원국들의 경제성장에 대하여 생산요소별(노동투입, 자본투입, 총요소생산성) 기여도를 분석하였다.

ⓒ 2019 Research Institute of Industry and Economy

3.2. 인구보너스 약화와 후진성 이점 고갈

노동측면에서 성장률 기여도는 노동생산성 증가율, 근로시간 증가율, 고용률 증가율 및 생산가능 인구 증가율 합으로 구성된다. 한국경제연구원(2019)이 OECD 통계를 이용하여 1991년부터 2017년까지의 기간을 1990년대와 2000년대 및 2010년대 각각 3 기간으로 나누어 성장률을 100으로 보았을 때 각 요인별 증가율이 성장에 기여한 비율인 기여율을 추정하였다.

그 결과 노동생산성 경우 1990년대 85.3%에서 2000년대 106.1%로 상승하였다가 2010년대에는 76.8%로 하락하였고, 근로시간은 지속적으로 마이너스 기여율을 보였고, 생산가능 인구는 저출산·고령화 심화추세를 반영하여 기여율이 하락하는 추세를 나타냈으며 오직 고용률 기여율만 증가추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표 2 참조>. 고용률 경우 정부의 단기 일자리 정책에 대한 재정투입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지난 30년간 한국 경제 환경은 수요, 생산, 소득이 선순환적으로 증가해 왔었다. 생산가능인구(15세에서 64세까지 생산 활동을 담당하는 인구)가 증가하면서 막대한 노동력과 수요가 창출되어 왔던 소위 인구보너스 효과가 지속적으로 커져왔던 시기였다. 말하자면 생산성 향상과 노동 투입 증대라는 두 축이 그간 한국 경제 성장을 견인해 왔던 것이다.

〈 표 2 〉 노동측면 성장률 요인분해(단위: %, 연도별 평균)

	GDP		노동 생산성		근로자 연평균 근로시간		고용률		생산가능인구	
	증가율	기여율	증가율	기여율	증가율	기여율	증가율	기여율	증가율	기여율
’09~’00	7.0	100.0	6.0	85.3	−0.7	−9.4	0.3	4.9	1.3	18.1
’01~’10	4.4	100.0	4.7	106.1	−1.5	−33.4	0.6	13.9	0.7	14.6
’11~’17	3.0	100.0	2.3	76.8	−0.8	−27.6	1.1	37.3	0.4	13.6
전체기간	5.0	100.0	4.6	90.8	−1.0	−20.1	0.6	12.9	0.8	16.3

자료: 한국경제연구원(2019) 보도자료 참조

그러나 한국 경제는 노동 투입 둔화현상 심화, 즉 인구보너스 소멸에 따른 경제의 부정적 변화에 직면해 있다[10]. 통계청에 따르면 한국 생산가능인구도 2016년 3,763만 명

10) 과밀인구의 중요한 이점 중 하나는 사회에 경쟁이 치열해져 인구 질(質)이 향상되는 것이다. 좁은 국토에 5,000만 인구가 몰려 사는 한국인은 극심한 경쟁을 통해 교육·능력·자격 등을 유별나게 키웠다. 이렇게 훈련된 국민은 경제성장 여건이 주어질 때는 국가경쟁력 제고와 수많은 일터 창출에 모두 참여함으로써 긍정적 역할을 해왔다. 그러나 저성장·취업난 시대에 돌입하면 그만큼 치열하게 사회적 분열, 갈등, 스트레스 등을 발생시키는 원천이 될 수 있는 잠재 요인 역할을 하게 된다. 이는 2010년 대 중반 이후 한국 사회의 갑과 을, 금수저·흙수저, 헬조선 논란과 같은 한국적 현상에서 단적으로 드러난다.

ⓒ 2019 Research Institute of Industry and Economy

을 정점으로 2017년부터 감소세로 접어들어 2035년 3,089만 명, 2060년 2,187만 명으로 감소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말하자면 45년 내에 40.8%의 생산가능인구가 줄어든다는 예측이다.

생산가능인구 감소는 내수경기 위축→투자 감소→성장률 둔화→내수 감소의 악순환을 만들 수 있다. 일본은 1996년 이후 생산가능인구가 줄면서 그 후 20년 이상 소비절벽에 따른 저성장 시대를 맞았다. 개인과 기업 소득이 줄면서 국가 세입도 줄었고 재정적자도 커져 갔다. 가계 발 불황은 다시 기업 발 불황으로 전이돼 가계를 압박하는 소위 복합불황이 형성된 것이다. 한국경제에서도 이런 양태가 그대로 재연될 수 있고 최대 위협 요인으로 등장했다.

이는 비단 경제문제에만 머물지 않았다. 복합불황이 지속되면서 구조조정으로 조기퇴직하고 자영업을 시작한 임금노동자들이 파산해 신용불량자가 되는 등 일본사회 한계계층들이 무너졌다. 대학을 갓 졸업한 젊은이들은 취업 빙하기를 겪으면서 평생 비정규직에 머무는 일이 관행화되었다[11]. 고도 성장기에 자산을 축적해 그나마 소비여력이 있는 노인들은 길어지는 생애 주기로 인해 극도로 소비지출을 기피했다. 이런 일본의 고통스런 경험이 한국경제에 이미 나타나고 있고 그대로 반복 심화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 베이비붐(1955~1963년 출생자) 세대 은퇴가 본격화되면서 고령화 심화도 중첩되고 있다. 통계청의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총인구 중 65세 이상 인구비중이 2018년 8월 기준 14%(726만 명)인 고령사회로 진입했다[12]. 2025년에는 20% 대인 1,051만 명에 도달하고[13] 2035년에는 28.7%인 1,518만 명으로 늘어나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출산율 문제는 더 심각하다. 1970년 4.51이던 합계출산율이 1980년 2.73, 1990년 1.59, 2000년 1.47, 2010년 이후 거의 1.2 수준으로 떨어지고, 2019년 2월말 기준 OECD 회원국 중 유일하게 1 이하(0.98)로 떨어졌다[14]. 1990년대 65만 명 이상이던 신생아 수가

11) 실제로 한국 경우 2014년 이후 2018년까지 실업률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통계청의 2019년 8월 고용 동향에 따르면 청년(15~29세) 실업률도 외환위기 이후 가장 높다. 취업준비생까지 포함한 청년층 확장(체감) 실업률은 23%에 달한다. 청년 5명 중 1명꼴로 사실상 실업 상태라는 의미다. 전체 확장 실업률(11.8%)의 두 배가 넘는다.

12) 1980년 노인복지법이 제정될 당시 145만 명에 비해 다섯 배 증가했으며 같은 기간 기대수명도 66.1세에서 82.6세로 늘어났다.

13) 일본에서도 고령화 문제가 큰 사회 이슈로 등장했다. 2025년 무렵이면 75세 이상(단카이 세대:1947-1949년에 태어난 베이비붐 세대) 고령자가 역사상 처음으로 2000만 명을 넘어서기 때문이다. 노인 의료비와 간병비, 연금 지급 비용이 급증할 경우 일본 재정적자를 크게 압박할 것이다.

14) 한 여성이 가임기간(15-49세) 동안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를 말하며 인구를 유지·증가시키기 위해서는 2.07 이상이 되어야 한다. 그런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출산율 1.0명 미만의 '초저출산 국가'로 분류되는 나라는 한국이 유일하다. 통계청은 '2017년 출생 통계'에서 2016년 기준 36개 OECD 회원국의 합계출산율 평균은 1.68명인데 비해 한국 합계출산율은 1.172명이라고 발표했다. 한국 합계출산율은 2001년 1.309명을 기록한 이후 16년 동안 줄곧 1.3명 미만에 머물고 있다가 2018년 드디어 세계에서 유일한 출산율 1 미만(0.98) 국가가 되었다.

ⓒ 2019 Research Institute of Industry and Economy

2000년대 50만 명 대 2010년 이후에는 40만 명대로 감소한 상태이며 2016년 이후부터 40만 선이 위협받다가 2018년 말 기준으로 32만 5,000명가량으로 하락해 30만도 위협받고 있는 사정과 맥을 같이 하고 있다[15].

이근태·이지선(2017; LG경제연구원)도 인구증가율 하락과 고령화에 따른 평균 노동생산성 저하, 임금인상, 일인당 소득 및 소비 감소, 부동산 가격 하락 등 부정적 영향을 우려하고 있다. 또한 송호신·허준영(2017)의 보고에 따르면 저출산과 고령화는 재정지출 증대 요인으로 작용하면서 향후 50년 간(2016-2065) 약 140조 원의 지출 증대를 예측하고 있다. 반면 경제활동 인구는 줄어들면서 세입은 줄어들 것이 확실해지면서 재정 건전성 악화 문제도 큰 과제로 부각되었음을 지적하고 있다.

이미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실업이 늘면서 실업급여 지출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고, 고용유지 관련 지출을 늘리면서 고용보험료 인상도 불가피해졌다. 지출이 대폭 늘어난 국민건강보험도 적자로 돌아서면서 보험료율을 또 인상해야 할 상황이다. 국민연금은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 잠재적 부채가 쌓이고 있는데도 개혁은 전혀 손대지 못하고 있다. 어떤 세금보다도 부담이 훨씬 큰 사회보험료율의 대폭적 인상은 이미 예정돼 있다고 봐야 한다.

김원규·황원식(2017:산업연구원)은 산업정책 차원에서 저출산과 고령화의 영향을 살펴보고 있다. 이 연구에서도 기존 이론 및 실증연구 결과처럼 인구 비율 감소와 투자, 노동, 총요소생산성, GDP, 대외경쟁력 등 변수 간 관계를 추정한 결과 부정적 영향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커져 있다는 사실이 입증되었다. 따라서 20년간 수많은 시행착오를 거듭한 일본 사례를 반면교사 삼아 철저히 연구하고 대응책을 마련해야 할 상황에 처해 있다.

이런 인구보너스 약화요인들은 총요소생산성 하락과 겹쳐지면서 초저금리 하에서도 막대한 시중자금이 기업투자로 이어지지 않고 부동산 투자로 몰리게 하면서[16] 혁신 지향적인 자금 선순환 구조 형성을 방해하는 근거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 심각성이 더해지고 있다.

경제 활력 지표 역할을 하는 통화승수와 통화유통속도에서도 한국 경제 구조적 약세

15) 이런 현상을 두고 크리스틴 라가르드 IMF 총재는 한 대학 강연회 후에 한국사회를 저출산-저성장과 생산성 악화-재정악화 악순환으로 이어지는 '집단적 자살사회(collectively suicide society)'로 표현하기도 했다(한국경제신문, 2017/10/25).

16) 남기업(2018) 조사통계에 따르면 2005년에서 2016년 11년간 개인 토지소유면적은 11억 4,000만평이 줄어들고 법인 토지소유면적은 25억 6,000만평이 늘어났다는 것을 보게 된다. 문제는 매입 부동산이 생산 활동에 필요한 토지 매입인가 하는 점이다. OECD 국가 기업들과 비교한 통계를 보면 한국 법인은 다른 나라에 비해 토지매입에 엄청난 자금을 투자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기업이 자본재에 투자하는 총고정자본형성에 투입되는 비용 대비 비 생산비 금융자산(90% 이상이 토지로 알려져 있음)의 순구입(구입-판매) 비율을 보면, 한국 경우 2005~2016년 동안 평균 15.92%인데 반해 OECD 평균은 1.49%이다. 즉 한국이 OECD 국가의 무려 10배나 된다. 이와 같은 통계는 한국 기업이 토지 투기에 상당한 돈을 쏟아 붓고 있는 것임을 반증하는 증거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 2019 Research Institute of Industry and Economy

추세는 그대로 드러난다. 한국은행 발표에 따르면 한국 통화승수는 지난 2010년까지 24 수준이었지만 이후 지속적으로 하향곡선을 그리면서 2016년 12월 16.83, 2017년 11월 15.96까지 떨어져 하락세가 이어지는 상황이다[17]. 이를 반영하듯 시중 통화량이 얼마나 경제활동에 사용됐는지를 보여주는 통화유통속도도 사상 최저치로 떨어졌다. 통화유통속도는 2010년 0.77 수준에서 2015년 0.71까지 떨어졌다. 2016년 3분기에는 0.69를 기록하며 처음으로 0.7대가 깨지기도 했다(조대형, 2017:2 참조).

통화승수와 통화유통속도가 계속 떨어지고 있다는 것은 중앙은행 통화정책이 점차 실효성을 잃고 있다는 뜻이다. 실제로 현재 기준금리는 역대 최저치인 1.25%까지 떨어졌지만 투자나 소비로 이어지기보다는 단기성 금융상품이나 부동산에 돈이 몰리고 있는 상황이다. 2016년 시중에 풀린 통화(M2)는 2,342조6213억 원에 달한다. 이 중 단기 대기성 자금 성격 통화가 크게 늘어났다[18].

이처럼 시중에 풀린 돈과 실물경제가 겉도는 경제 이원화(dichotomy) 현상이 심해지면 성장률 저하와 국민 가처분 소득 감소 및 산업 활력 저하를 초래하게 되는 것이다. 지금까지 논의를 고려할 경우 인구보너스가 크게 감소하고 있고 이런 추세가 경제 이원화 현상과 결합되는 상황에서는 기술진보나 생산효율성 증대가 이루어지지 못할 경우 한국경제성장에 추가적인 하방압력이 커질 것임은 명확하다.

강종구(2017b)에 따르면 인구보너스 감소로 산업구조 측면에서도 제조업 비중은 줄고 서비스업 비중이 높아질 것이란 전망이 제기되었다. 따라서 저 기술 제조업은 수요가 크게 줄어들 수밖에 없어 원활한 구조조정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가는 한편 해외시장 개척에 집중해야 할 것이다. 나아가 의료, 보건, 금융, 보험, 복지 등의 서비스 분야에서는 수요증대를 대비해 공급능력과 경쟁력을 높여나가야 할 것이다.

3.3. 부채주도 경제구조 심화와 저성장

한국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 총부채 비율은 2004년 56.5%에서 2017년 말 기준 240% 수준으로 급등했다. 이는 글로벌 평균(224.2%)보다 높은 수준이다. 국제결제은행(BIS)이 43개 나라의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을 발표했는데, 2018년 3월 말 기준 한국은 95.2%로 집계되어 가계 빚 규모가 국내 경제 규모와 비슷한 수준으로 증가했다.

국제결제은행(BIS)이 GDP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경제 성장에 위협이 된다고 경고하는 임계점 75-85% 수준을 넘어섰다. 기업부채 경우 GDP대비 100%를 상회하여 세계

17) 본원통화를 시중통화량(M2)으로 나눠 계산하는 통화승수(평잔·원계열 기준)는 중앙은행이 화폐 1원을 발행했을 때 몇 배의 통화량을 창출하는지를 보여주는 지표다.

18) 이승호(2016; 26-29) 연구에서는 이를 저금리 기조와 맞물린 '결제성 수신' 혹은 '단기 부동화 자금'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요구불예금, 수시입출식 저축성예금, 머니마켓펀드(MMF), 종합자산관리계좌(CMA) 등의 증가를 의미한다. 실제 2015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 2019 Research Institute of Industry and Economy

경제포럼(WEF)에서 우려하는 임계치 80%를 넘어서고 있다. 여기에 정부부채마저 빠른 증가속도를 보여 2020년 GDP대비 40%를 넘어설 가능성이 높아 보여[19] 한국경제의 부채주도 성장구조에 대한 시장 우려가 커지고 있다.

2016년 이후 여타 국가 대비 낮은 수준을 유지하던 정부부채 증가세마저 빨라지고 있다는 점이 인구보너스 감소 현상과 겹쳐 우려스럽다. 이미 높은 수준을 기록한 가계부채와 기업부채에 중첩되어 경제성장의 제약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임을 알 수 있다(강종구b, 2017). 정부부채 증가와 함께 적자성 국가채무[20]가 크게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정부부채 질적 상황도 악화될 가능성이 매우 커졌음을 알 수 있다.

게다가 향후 청년실업 증대, 고령화, 저출산 등을 감안할 경우 보건·복지·고용 지출이 급증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져 저성장률 하에서 한국 재정 부담이 더 커질 것이 명확해 정부지출 증대 측면에서 효율적 재정집행 중요성이 커졌다. 이미 2002년 대비 2017년 한국 조세부담률(17.8%→20%)과 국세 부담률(13.6%→15.3%)도 꾸준히 늘어왔다. 따라서 재정 개혁을 먼저 해야 증세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될 것이다(서유진, 2019 참조).

부채주도적 성장에 따른 경제주체들 부채 증가는 결국 향후 금리상승기에 성장에 큰 제약요인으로 등장할 것이 확실하다. 가계 원리금 상환부담 증가는 가처분 소득을 줄여 내수 부문 성장을 제약할 것이며 부동산 대출과 연계된 대출 경우 부동산 시장이 침체될 경우 부채디플레이션을 초래해[21] 장기 복합불황을 확대시킬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는 금융기관 부실을 조장하여 금융건전성을 해치게 되며 결국 성장 가용 금융자원을 제약하게 될 것이다. 특히 가계부채가 저소득 취약계층에 더 쏠려있어[22] 소득여건이 악화할 경우 곧 바로 대출부실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상태에 있기 때문이다.

---

19) 정부부채는 2000년 GDP대비 17.5%에서 2000년대 20% 후반 대를 유지하다 2009년 이후 30%를 넘어서더니 2017년 말 기준으로 38.2%를 기록해 40%대를 넘어설 상황이다. (http://www.index.go.kr/unify/idx-info.do?idxCd=4010)

20) 일반정부부채 중 적자성 채무 비중은 58.2%에 달한다. 적자성 채무는 정부가 경기 부양 등을 위해 재정지출을 늘렸는데도 경기가 살아나지 않아 세수가 증가하지 않거나, 복지를 위한 재정 수요가 세수보다 빨리 늘어날 때 증가한다(이상열, 한국경제신문, 2017-04-10 A10면).

21) 어빙 피셔(Irving Fisher) 시카고대 교수는 '부채 디플레이션'을 주장했다. 부채 디플레이션이 발생하면 가계의 실질부채부담 증가, 금융부실, 건설경기 침체가 발생하고, 이는 연쇄적으로 소비부진, 투자위축, 고용부진을 불러와 장기 복합불황을 초래하게 된다는 것이다. 한국에서는 2013년에 이미 주택가격이 하락해 과도한 주택담보대출 원리금 상환 부담으로 고통 받는 하우스 푸어 문제가 사회·경제적 문제로 대두된 적이 있었다. 일본의 '잃어버린 20년'도 부채 디플레이션으로 설명된다. 서브프라임 위기에 직면해 2009-2014년에 걸쳐 3차례 시행된 미국의 양적완화 정책도 바로 부채 디플레이션으로 초래될 수도 있는 장기불황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였다.

22) 2016년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르면 소득1분위 가처분소득 대비 부채비율은 482.7%로 고소득층인 5분위의 214.8% 보다 크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반영하듯 조영무(2017)는 2016년 2월 강화된 가계대출 규제대책 '여신심사 선진화 가이드라인'이 실시된 이후 이 가이드라인 대상에서 제외된 취약계층의 '가계부채 풍선효과'로 비은행권 대출 및 기타대출이 크게 증가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 2019 Research Institute of Industry and Economy

3.4. 소득불균등 심화와 저성장 함정

한국 정부 공식 통계 문제점을 지적하고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등을 바탕으로 새로운 소득불평등 수준을 추정한 김낙년(2013)의 추정[23]에 따르면, 한국은 2012년 현재 소득 상위 10%가 전체 소득의 45%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전 세계에서 소득불균형이 가장 심한 미국(소득 상위 10%가 48.16% 점유)에 육박하는 수치이며 일본(40.50%), 프랑스(32.69%)보다 훨씬 높은 수치다. 1979-1995년 30%에 머무르던 상위 10%의 소득 비중은 2000년 35%를 넘었고, 2006년 42%로 크게 높아져 외환위기 이후 빠르게 증가하였음을 보여준다.

또 김낙년(2013)과 김낙년·김종일(2013)에 따르면 한국 경우 지니계수와 소득집중도 측면에서도 모두 외환위기 이후 빠르게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에 따르면 상위소득자의 누락과 금융소득 등의 과소보고를 보정할 경우 2010년 가처분 소득 기준 지니계수는 가처분 소득 기준 0.371 수준으로 1996년 0.302에 비해 지속적으로 악화되어 OECD 회원국 중 5번째로 불평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 5분위 배율도 악화되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 지표는 5분위계층(최상위 20%)의 평균소득을 1분위계층(최하위 20%)의 평균소득으로 나눈 값을 말한다. 이 배율은 지니계수와 함께 국민소득 분배 상태를 나타내는 대표적인 지표이다. 소득 5분위 배율 값이 클수록 소득분배 불균등 정도는 커지게 된다.

박명호(2016)의 경우 위에서 논의된 5분위 배율과 지니계수에 근거한 연구와 달리 국세청 통합소득세 신고 자료를 활용해 소득집중도를 기준으로 소득분배 상황을 분석하였다. 방법은 상이하지만 외환위기 이후 한국 소득분배가 악화되어 왔다는 점에서는 같은 결론에 이르고 있다. 또 한국노동패널 조사를 활용한 최제민·김성현·박상연(2018)의 근로소득 기준 연구에서도 유사한 결과가 나타나고 있다.

이들 소득불평등 지표 악화는 낙수효과 모델(trickle down effect, spill over effect)이 더 이상 한국경제에 자동적으로 적용될 수 없음을 시사한다. 이는 OECD(2016c: chapter 3) 보고서에서도 단적으로 드러나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 [가계소득/GDP] 비율이 1995년 69.6%에서 2014년 64.3%로 5.3포인트 하락했다. 이 기간 동안 한국 1인당 GDP는 연평균 3.8% 증가한 데 비해 1인당 가계소득은 2.1% 늘어나는 데 그쳤기 때문이다.

통계청(2016년 4/4분기 및 연간 가계동향, 각 분기 가계동향)에 따르면 이런 하락 추세는 2015년과 2016년에도 이어지고 있다. 특히 2013년부터 가계소득 증가 속도가 급

23) 2012년 이후 발표된 김낙년 교수 논문과 통계수치들은 'World top income database'에 등재되고 이 데이터들은 OECD에서도 공식 데이터로 인정하여 이를 통해 한국 소득분배 관련 분석의 기초자료로 공식 활용하고 있다. 이는 그동안 국제기구에 한국의 정확한 소득통계가 보고되거나 집계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김낙년의 소득통계분석에 근거해 논의를 전개하려 한다.

ⓒ 2019 Research Institute of Industry and Economy

격히 둔화하기 시작했다고 밝히고 있다. 2013년 월평균 가구소득은 전년보다 2.1% 늘어나는 데 그쳤으며 2014년 3.4%에 이어 2015년에는 1.6%로 증가 폭이 줄어들고 2016년에는 0%대로 내려갔다.

2015년 기준 한국의 '더 나은 삶 지수(Better Life Index)' 조사 결과(OECD c 참조) 전체 36개국 중 29위였다. 이런 낮은 순위의 배경에 사회 불안정을 키우는 소득불평등이 존재한다. 조윤제·박창귀·강종구(2012)와 황선재(2015) 등 일련의 연구에서는 1990년대 이후 한국 소득불평등과 양극화가 심화함에 따라 사회 구성원의 상대적 박탈감이 커졌고, 소득불평등이 클수록 자살률과 이혼율, 우울증 관련 통계가 증가했고 합계출산율과 결혼률이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사실 한국사회 이런 단면은 외환위기 이후 강화되어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거의 고착화된 것으로 나타난다. 결국 불평등 문제 해소는 정치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한국 정치가 신자유주의 체제로 전환을 결정했듯, 이 경로를 정정하고 불평등을 해소하는 사회로 나아갈 것을 결정하는 동력도 역시 정치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정부가 어떤 경제정책과 복지정책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경제구조는 달라질 것이기 때문이다.

3.5. 4차 산업혁명 시대 디지털자본 경쟁력과 산업경쟁력 및 규제

4차 산업혁명 시대 한국 경쟁력에 대한 현 주소는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 조사(김정균, 2017)[24]에 잘 드러나 있다. 조사 결과를 보면 한국은 4차 산업혁명 경쟁력 순위에서 미국(3위), 영국(8위), 독일(13위)은 물론이고 대만(14위)에도 뒤쳐지는 20위권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결과는 UBS(Union Bank of Switzerland)조사에 근거하고 있기도 하다. UBS는 2016년 1월 OECD 주요 45개국 중 한국의 4차 산업혁명 준비 정도를 25위라고 발표했다[25]. 항목별로는 기술수준 23위, 교육 시스템 19위, 노동시장 유연성은 83위에 위치했다. 1위와 2위는 스위스와 싱가포르가 각각 차지했다. 45개국 중 25위라면 중위권이라고 자위할 수 있지만 미국, 일본, 유럽, 중국 등 핵심 경쟁국과 비교해 가장 낮은 순위이다.

또 무역특화지수, 산업내 무역지수, 비교우위지수, 수출경합도와 집중도 등 정보통신

24) 김정균(2017)의 연구는 스위스 금융기관인 UBS가 발표한 4차 산업혁명 준비도, 세계경제포럼(WEF)의 네트워크 준비지수(network-readiness-index),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의 디지털 경쟁력지수 등을 합산해 순위를 매겼다. 한국은 각각 45개국 중 25위, 143개국 중 13위, 19위를 기록했다.

25) https://www.ubs.com/...ubs/...ubs/...==/wef-white-paper-2016.pdf

ⓒ 2019 Research Institute of Industry and Economy

부문 한·중·일 국제경쟁력 추이를 살펴본 최남석(2015) 연구에서도 2010년대 이후 한국 경쟁력이 중국에 상당히 잠식되고 있으며 일본 시스템 반도체 부문과 비교해 아직 열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보통신부문 경쟁력 저하와 4차 산업혁명 대비 수준이 왜 이렇게 기대 이하의 수치를 기록하고 있는 걸까?

여러 원인 중 하나로 한국에서 과도한 규제의 존재를 지적하고 있다. 규제가 기술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면 외국에서 성공적으로 운영되는 혁신적 비즈니스 모델이 한국에서는 출시가 어렵거나 불가능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또 혁신적 기술 서비스가 규제 장벽을 넘지 못하고 사장되면 기술발전과 산업적 성장은 물론 소비자 후생에도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는 한국에서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을 테스트베드로 시행해 볼 수 있는 제도적정비가 미흡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 문제는 강준모·김정언·이시직(2017)에서 잘 드러나고 있다.

또 하나의 원인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글로벌 소프트웨어(SW) 경쟁력이다. 한국 하드웨어(HW)부문은 강한 경쟁력을 갖고 있지만, 글로벌 소프트웨어 경쟁에서는 상당히 뒤쳐져 세계적 추세를 제대로 따라가고 있지 못한 것으로 나타난다.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IITP, 2017) 산업분석팀은 「IT 시가총액 동향」보고서에서 한국 소프트웨어 비중은 10년 전 9%에서 2016년 15%로 늘어났지만, 여전히 하드웨어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고, 특히 삼성전자가 포함된 IT 하드웨어 업종 비중이 50%를 웃돌아 특정 업종 편중 현상이 심각한 것으로 밝혔다[26].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경우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비중은 2016년 기준 38대 62이며, 특정 업종에 대한 편중도 작은 편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중국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비중은 10년 전 70대 30에서 작년 42대 58로 급격하게 변화했다고 지적했다[27].

SW는 단순프로그램이라기 보다는 HW를 비롯한 제품과 서비스를 작동시키고 산업을 고도화하고 서비스를 혁신하는 핵심기술이다. SW는 오피스 프로그램과 같이 개별 상품도 있지만, 휴대폰 등 ICT제품, 자동차, 조선 등 국가전략산업 제품을 고도화하고, 금융 의료 등 서비스 혁신을 촉진하는 산업고도화를 위한 핵심 기술이기 때문에 산업 비타민으로 인식되고 있다(최영준·박헌용·박정훈, 2016;47). 즉 제조업과 서비스업 등 산업 전반을 지능화하고, 다기능화 함으로써 산업 부가가치를 높여 국가경쟁력을 견인하는 디지털자본인 것이다.

---

26)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비중은 증시에 상장된 관련 기업들 시가총액을 기준으로 추산한 것이다. 전체 IT 업종은 반도체, 전자부품, 소프트웨어, 인터넷, IT 서비스, 가전, IT 하드웨어, 통신장비 등으로 나눠 분석했다.

27) Fobes가 선정한 세계 2000대 SW기업 중 한국기업이 하나도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한글과 컴퓨터'사가 2016년 매출액이 1,012억 원으로 미국 마이크로소프트의 매출액 약96조5000억 대비 0.1% 수준에 그친다(김경필, 2017)

ⓒ 2019 Research Institute of Industry and Economy

Jacques and Manyika(2013)는 디지털 자본이 이미 글로벌 GDP 증가의 3분의 1을 차지할 정도로 미래경제를 이끌어갈 중요한 성장 동력이라고 본다. 지능정보 시대[28] 근간으로 활용되는 자원이 바로 디지털 자본[29]이다. 지능정보 시대에 기업이나 정부가 급변하는 기술 혁신을 이해하고 디지털 자본을 축적해 활용하는 노력을 하지 않는다면 경제적 기회를 포착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도태될 수 있다.

이런 추세는 윤우진(2017)과 이부형·박용정(2017) 두 연구에서 잘 드러나고 있다. 윤우진(2017)은 1995년부터 2015년까지 20년간 수출 빅데이터를 분석해 한국 산업경쟁력이 세계 16위에서 13위로 올라섰으나 수출상품 성장잠재력 지표인 산업응집력 지수는 21위에서 25위로 오히려 떨어졌다는 결론을 얻고 있다. 말하자면 현재 경쟁력은 나름대로 버티고 있으나 미래 경쟁력은 밀리고 있다는 것이다.

이부형·박용정(2017)은 한국과 일본 사이 경제·산업 전반에 관한 경쟁력 추이를 비교우위 기준으로 비교 평가했다. 연구결과는 1980년대 이후 경제격차가 빠르게 좁혀져 오다가 2010년대 이후 잠재성장률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면서 2016년 이후 경제격차가 다시 재 확대되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이들 연구는 과학기술 경쟁력, 4차 산업혁명 대응력 등에서 한국 경쟁력 정체 상태가 계속되고, 부가가치 경쟁력 등도 상대적으로 하락해 선진국과 격차도 벌어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3.6. 투명성 지수와 사회적 자본 구축의 미비

제도적 측면의 경쟁력 지표로 부패인식지수(Corruption Perceptions Index, CPI), 혹은 국제 투명성지수를 차용할 수 있을 것이다 이들 지수는 국제투명성기구(TI)[30]에서 발표하는 지수로서, 대중들이 느끼는 국가 청렴도에 대한 지수이다. 한국은 전체 176개 국가 중 2016년 52위로 나타나 여전히 경제력에 걸맞지 않은 순위를 보이고 있다.

28) 노동투입 증가와 생산성 향상에 의한 성장이 한계에 부딪치고 있는 시점에 생산성을 높일 새로운 동력으로 주목받는 것이 지능정보화다. 지능정보화란 모든 사물을 연결해 정보를 디지털화하고, 첨단지능을 적용해 인간의 한계를 넘는 자동화와 최적화의 가치를 이끌어내는 활동을 말한다.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인공지능, 플랫폼 기업, 무인주행, 디지털 헬스케어, 가상·증강현실 등이 모두 지능정보화로 묶일 수 있다. 지능정보화는 벌써 수많은 가치창출 기회와 산업적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아마존 물류자동화와 같은 유통구조의 변혁, GE의 프리딕스 플랫폼과 같은 빅데이터에 기반을 둔 신규 사업모델 창출, 싱가포르의 민관협력기관 ARTC와 같은 디지털 컨소시엄 등장이 그 예다. 이로 인해 국가 경제나 기업 매출 차원에서 정량화되지 않는 막대한 경제적 잉여가치가 최종 소비자에게 돌아간다.

29) 디지털 자본은 디지털화된 상품과 서비스를 창출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자원을 의미하는 것으로 서버, 라우터, 인터넷 소프트웨어, 온라인 플랫폼 등의 유형자산뿐 아니라 축적된 디지털 정보, BDAA(big data advanced analytics: 빅데이터 기반 첨단분석) 역량, 사용자 경험을 더 증대시키는 디자인 등 무형자산까지 모두 포함한다.

30) 독일 베를린에 본부를 두고 있는 국제NGO. 부패인식지수는 10여개 기관의 13종류 설문조사 보고서를 기반으로 산출하고 있다. 13개 설문조사/평가는 사업가들의 의견을 설문조사한 것, 혹은 분석가 집단이 업무평가를 한 것이다.

ⓒ 2019 Research Institute of Industry and Economy

한국 경우 지수가 2000년대 내내 50대 초반에서 중반 수준을 나타내어 선진국과는 상당한 격차를 나타내고 있다[31]. OECD 35개국 중에서는 29위로 한국 경우 하위권이다. OECD 가입국 중 한국보다 순위가 낮은 곳은 슬로바키아, 헝가리, 이탈리아, 그리스, 터키, 멕시코뿐이다.

부패인식지수는 정치적으로 선진국인지 비교하는 기준으로 영국의 이코노미스트가 발표하는 민주주의지수, 프랑스의 RSF(Reporters Without Borders)가 발표하는 언론자유지수와 함께 개별국가의 사회적-제도적 성숙도를 나타내는 지표로 가장 많이 사용된다.

부정부패의 사회적 비용은 만만치 않을 것이다. 무엇보다 한 국가 민주주의 성숙도와 정부 정책의 효율성을 저해하고, 소득 불균등을 높여 결과적으로 사회 갈등 지수와 사회적 아노미(social anomie) 현상[32]을 높일 것이기 때문이다. 갈등지수가 높아지면서 한국 사회통합수준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최하위 권에 머무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발간한 '사회통합지수 개발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1995부터 2015년까지 20년 간 5년마다 사회통합 지수[33]를 측정한 결과, 한국은 5차례 모두 지수 값이 0.2이하로 OECD 30개 회원국 중 29위를 기록해 심각한 수준으로 평가되었다. 결국 한국경제를 살펴보면 빠른 경제발전과 성장을 달성해 온 것은 사실이지만, 경제 규모에 비해 국가기관과 제도, 기업 문화 등의 투명성과 합리성 수준 및 사회통합수준이 글로벌 스탠다드에 크게 뒤쳐져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시 말해 경제발전과 성장에 맞추어 신뢰에 기반한 사회적 자본의 강도가 별달리 개선되지 못해 각종 사회적 기회비용[34] 등을 높여 오히려 혁신과 창의성을 가로막아

31) http://www.transparency.org/cpi2015에서 인용. 공교롭게도 UN에서 발표하는(2019 세계행복보고서) 행복지수 순위도 54위여서 부패지수와 행복지수가 높은 상관성을 갖는 것처럼 보인다.

32) 사회갈등지수란 한 사회의 노사 갈등, 윤리적 갈등, 문화적 갈등, 세대 갈등, 남녀 갈등, 계층 갈등, 지역 갈등 같은 그 사회에 존재하는 모든 갈등을 합쳐 수치로 표현한 것이다. 2009년 삼성 경제연구소에서 발표한 '한국의 사회 갈등과 경제적 비용'이라는 보고서에 나온 용어로 한국 사회갈등지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7개국 가운데 4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적 아노미(Anomie)현상은 사회적 혼란으로 인해 규범이 사라지고 가치관이 붕괴되면서 나타나는 사회적, 개인적 불안정 상태를 뜻하는 말이다. 아노미 상태에 빠지면 삶의 가치와 목적의식을 잃고, 심한 무력감과 자포자기에 빠지며 심하면 자살까지 하게 되는 현상이 발생한다. 이는 한국의 자살률이 15년 연속 OECD 1위를 기록하고 있는 것과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된다.

33) 사회통합지수가 높은 국가는 덴마크였고, 노르웨이, 핀란드, 스웨덴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사회통합지수는 사회적 포용, 사회적 자본, 사회이동, 사회갈등 및 관리 4개 영역 19개 지표 값을 근거로 산출된 것이다.

34) 부정부패와 성장 관계를 다룬 논문들은 학계에 다수 있다. 이들은 대체로 부패가 심한 나라일수록 생산성이 떨어지고, 경쟁력이 낙후된다는 결론을 제시해 왔다. 왜냐하면 부정부패는 사회적 자원 배분을 비효율적인 곳으로 향하게 하고, 필요한 규제를 무력화시켜 정책결정을 왜곡하며, 사회적 자본을 약화시킨다. 또 시장에서 건전한 경쟁이 사라지고 기업가 정신이 흐려지며, 혁신도 약화된다. 이런 점에서 부패의 사회적 비용을 단순히 뇌물의 액수나 착복한 자금 규모로 산정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사회 전체적으로 자원 흐름이 잘못되고, 혁신이 둔화되며, 가치 창출(valuecreation)이 불가능해 지기 때문이다. 더 근본적으로는 사회 구성원들 모두가 연결된 신뢰 같은 사회의 토대를 무너뜨리게 된다. 나아가 국민 전체 삶의 질도 하락하는 것은 물론이다.

ⓒ 2019 Research Institute of Industry and Economy

미래의 질적, 양적 성장에 대한 기대감을 억압하는 사회적 장애요인으로 작동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것이다.

오죽하면 국제투명성기구 한국 지부인 한국투명성기구가 독립적 반부패국가기관 설치와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 신설, 검찰 개혁과 낙하산 인사제도 등 국가적 윤리인프라 재구축, 기업부패방지법 제정, 부패기업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공익신고자보호법 개정으로 보호범위 확대 등을 촉구할 정도이다.

4. 고소득 중진국 함정 요인들에 대한 대응전략

Ⅱ장, Ⅲ장 논의를 통해 기존 중진국 함정론에서 지목한 핵심 요인들이 그대로 한국경제 저성장 함정을 추동하는 중요한 대내적 원인으로 작동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중진국 함정에 빠지지 않고 성장 발전해온 한국 경제가 '고소득 중진국 함정' 혹은 '초기 선진국 함정'에 빠져 있거나 빠져 들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문제는 함정에 빠져 있는 기간이 10년 가까이 되어가는 데도 불구하고 별다른 탈출 동력이나 조짐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지금으로서는 정치, 경제, 사회, 산업, 금융, 교육 등 전방위적 구조개혁 이외에 한국경제가 선택할 수 있는 대안이 없어 보인다. 말 그대로 한국경제가 빠져 있는 구조적 장기침체(secular stagnation)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는 과거 방식에서 벗어나 개혁적 제도변화와 신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실행전략이 시급히 요구된다. 특히 중국 등 경쟁국의 추격을 고려할 경우 머뭇거릴 시간 여유도 없는 상황에 처해 있다.

잠재성장률이 떨어지는 상황인데 고속성장 목표는 기대 밖일 수 있다. 따라서 우선 거시정책에 대해 이성적으로 판단하고 한계를 인정해야 한다. 재정·통화정책 중요성을 간과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분석 결과에 따르면 장기적으로 신 성장 동력을 추동해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리기 위한 구조개혁 정책과 산업혁신정책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최우선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4.1. 총요소생산성 제고-디지털자본과 산업 경쟁력 강화 전략

3장에서 살펴보았듯이 한국 경제가 당면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대내적 위협요인은 다름 아닌 구조조정 지연, 인구보너스 감소, 디지털자본과 산업경쟁력 약화 등으로 대변되는 총요소생산성 침체라 할 것이다. 주력산업 부문에서 중국 등 경쟁국 기술추격이 거세지는 상황에서 신사업 육성, 핵심기술 역량 개발을 통해 차세대 성장 동력을 확충하고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함정탈출 과제로 합의가 모아지는 이유이기도 하다. 따라서 이런 과제지향에 투자가 집중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고 정책

 ⓒ 2019 Research Institute of Industry and Economy

역량을 집중시켜야 할 것이다.

산업 효율성과 생산성을 증대시키기 위해 실효적 R&D 투자를 늘리고 부가가치창출을 제고시킬 수 있는 방안들을 적극 모색해야 할 것이다. 특히 불황기일수록 공공R&D의 시장실패 보완 기능과 민간 R&D 유인 기능이 중요하기 때문에 정부R&D 정책은 민간과의 시너지 효과가 큰 분야, 즉 사업화 가능성이 높은 분야로 재원을 집중시키는 구조가 형성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시장과 경제 외형이 제약받는 장기불황기에는 노동과 자본 물량투입보다 생산성이 경제성장 속도를 결정짓기 때문에 산업과 기업 단위 생산성 제고 노력이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기업환경 개선 및 투자활성화를 추동하면서 투자활성화를 위한 전폭적인 규제개혁, 경쟁력 제고를 위한 기업의 선제적 사업재편 지원, 핵심 유망산업에 대한 R&D세제 지원 등이 산업경쟁력 보완을 위해 자주 거론된다. 이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민간 부문 아이디어를 자극하거나 산업 환경을 구축할 수 있도록 해주는 정부 역할이 매우 중요해 졌기 때문이다.

여기에 인력수요처인 기업 역할을 대학교육과 연계시키는 적극적인 노력도 동반되어야 할 것이다. 지금이야말로 대학이 기업과 손잡고 경험교육의 제도화에 전력해야 할 시점에 와 있다. 즉 산업연계 문제 해결형 교육(IC-PBL: Industry-Coupled Problem-Based Learning·)을 적극 도입해 학생들이 직접 개별 기업, 지역사회의 문제점을 해결할 방안을 찾는 수업을 제도화해야 한다. 더 나아가 기업의 미래지향적 해결과제들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소위 '멤버십 산학협력 R&D센터'를 설립해 적극 운영하는 방안이 한국 산업이 다시 추동력을 창출할 수 있는 장기적 대안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교육개혁과 병행해 정부는 기업 혁신 활동을 뒷받침해 신 성장 동력 확보[35]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각종 규제의 문제점을 총체적으로 파악해 규제완화 우선순위와 효과를 정하는 한편 점검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현행처럼 기업이 규제를 왜 풀어야 하는지 입증해야 하는 방식보다 담당 공무원이 왜 규제를 유지해야 하는지 입증하게 하고 입증에 실패하면 자동폐지 되도록 하는 '규제 입증 책임제'를 적극 고려해 보는 것도 좋은 대응책일 것이다[36]. 이 제도는 공무원 증원의 구체적 명분으로도 역할할 수 있어 더 절실한 아이디어이다.

35) 이근 교수는 한국경제학회가 주최한 '2019 한국경제 어디로' 토론회에서 한국경제 신성장동력으로 장(長)주기 산업, 융복합 기술, 암묵지 기술을 강조했다. 장주기 산업은 바이오시밀러·의료기기 등 산업주기가 길고 진입장벽이 높아 추격이 어려운 산업이다. 융복합 기술은 4차산업 혁명 분야, 암묵지 기술은 부품소재 등 '뿌리형 기술'이다. 그는 세 분야가 잘 되려면 규제혁신과 인재 공급이 핵심임을 강조했다(서유진, 2019).

36) 한 기업인의 제안으로 이미 정부는 '규제입증책임제'를 전 부처로 확대해 부처별로 개선 민원이 많은 1774개 행정규칙을 2019년 내로 정비할 계획이다(이태훈(2019)).

ⓒ 2019 Research Institute of Industry and Economy

4.2. 인구보너스 약화에 대한 대응책

인구보너스 소멸이 함정탈출을 가로막는 두 번째 중요한 장애요인임을 보았다. 이와 관련된 제 문제에 대한 효과적 정책개발이 시급한 과제로 등장했다. 정부는 우선 여성과 고령층 노동 참여율을 높이기 위한 보육시설 확충과 유연근로제 도입 등을 정부차원에서 적극 지원하려 한다. 특히 노령연금 등을 확충하는 방안이 있지만 국민연금 재정에 불리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현재로선 건강한 노인이 좀 더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최선의 대안이다.

5년 단위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시작한 2006년 이래 재정 투입액이 150조원을 넘어섰고, 증액 속도도 가팔라지고 있지만 출산율 하락은 한 번도 멈춘 적이 없다. 오히려 하락 속도가 가속화하는 모습이다.

정부와 지자체들은 현금지원으로 일관해온 예산 퍼붓기 식 저출산 대책을 멈추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틀 자체를 완전히 바꿔야 하는지 등을 총체적으로 점검할 때가 됐다. 기록적 출산율 추락으로 국민연금 건강보험은 물론이고 국가 재정에도 비상등이 켜졌기 때문이다.

출산율 개선을 위해서는 청년 층 취업을 촉진하는 방안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지역 기업투자를 촉진해 고용여건을 개선하는 것도 시급한 과제이다. 그런 연후에 지방 거점 대학 활성화, 지방 문화시설 확충, 결혼 촉진 공공중매 전문가 양성, 보육과 양육을 지원하는 가족지원 형 서비스산업을 공공지원책과 함께 확대해 나가야 할 것이다.

말하자면 저출산 종합 대책 뿐 아니라 지방 청년 인구 소멸 대책도 동시에 추진해 가지 않고 막연하게 청년 삶의 질 향상이나 양성 평등 강화를 주창하고, 다양한 가족 인정 같은 구호를 앞세운다면 상당시간 초저출산에서 벗어나기 힘들 것이다.

4.3. 부채주도 성장과정에서 신성장 동력 확충으로의 전환

세 번째 문제점은 가계부채 급증 등 부채증대에 의존한 경제운영은 중장기적으로 함정 탈출을 저해할 수 있는 요인이다. 소득주도 성장을 계속할 경우 안정적이던 정부부채도 악화될 가능성이 높아진 상태로 전환되고 있기 때문이다. GDP대비 30% 후반이던 정부부채가 2020년 이후 40%를 상회할 것이 확실시 되고 있다.

부채주도 성장궤적 문제는 우선 국가 총부채 관리를 철저히 수행하면서 각 경제주체의 부채 비중이 국제적으로 경고하고 있는 임계치를 크게 상회하지 않도록 우선 관리해야 할 것이다. 그런 연후에 경제 구조개혁을 통해 생산성이 높은 서비스업과 빅데이터, 인공지능(AI), 공유경제 등 신산업 육성으로 무게 중심을 옮겨가면서 소득증대를

 ⓒ 2019 Research Institute of Industry and Economy

꾀하고 이를 통해 부채중립적 성장 대안에 집중하는 것 외에 다른 대안이 없다.

문제는 2000년대 이후 새로 들어서는 정권마다 차세대 성장동력을 외쳐왔지만 산업의 성공적 세대교체에 실패하면서 장기 저성장 늪에 빠져 있는 현실이다. 과감한 산업혁신 정책 전환 없이는 부채주도 성장궤적에서도 벗어나기 어렵다.

현재 4차 산업혁명으로 대표되는 세계경제 변화는 생산, 마케팅, 인사, 재무 등으로 분절되어 관리되던 기업경영이 ICT를 활용한 정보공유를 통해 상호 연결되어 전사적인 생산성 향상에 주목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기업들이 선도적으로 기존 제조 방식을 혁신해 감으로써 글로벌 경쟁력 제고의 한계를 돌파해 갈 수 있도록 정부의 혁신 성장궤도 전환에 대한 일관된 지원정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4.4. 소득불평등 부작용 최소화를 위한 대응책

소득분배지표와 관련해 여러 논쟁이 있었지만 OECD 국가들과 비교했을 때 한국 분배 수준은 여전히 하위권에 그치고 있다. 한국의 2017년 팔마비율[37] 1.44배는 OECD 전체 36개국 가운데 30위에 그치는 수치다. 흔히 활용되는 지니계수(균등화 처분가능소득 기준)도 2017년 0.355에 그쳐 31위, 상대적 빈곤율(17.4%)도 33위에 그치고 있다(문재용, 2019).

3만 달러 돌파도 아직은 체감할 수 없는 형국이다. 왜냐하면 1인당 가처분 소득은 2017년 기준 1,874만원(약 1만 6573달러)에 그치기 때문이다. 이자와 세금 및 주거 부담 등이 소득보다 더 빠른 속도로 늘고 있고 2006년 이후 가계소득이 79% 늘어나는 동안 가계부채는 138% 급증하고, 소득분배율(상위20% 소득/하위 20% 소득)도 5.39배에서 5.47배로 커졌기 때문이다.

이런 소득불평등은 부정부패 등 사회적 제도적 자본 경쟁력 문제와 결합되면서 사회결속을 약화시켜 한국사회 전반에 사회적 아노미 현상을 강화시키는 한편 중진국 함정 탈출을 지연시키는 중요한 요인이 되어왔음에 주목해야 할 것이다. 저성장-양극화 함정의 문제는 사회 거의 전 부문에서 나타나는 갈등지수 고조와 높은 자살률이 이를 단적으로 증거하고 있다. 따라서 사회 응집력을 높일 사회적 대타협 혹은 포용적 경제성장 모델 구축이 절실한 상황이다.

즉 소득불균등을 완화시킬 대책과 함께 노동 시장 저비용과 근로 안정성 모두를 확보할 수 있는 적극적 노동 시장 정책 구축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동시에 부정부패-사회적 갈등지수 해결을 위한 사회적 자본 경쟁력을 높일 제도적 장치마련이 미래 경제성장에 더 없이 중요한 시점에 와 있는 것이다.

37) 소득 상위 10% 인구의 소득점유율을 하위 40% 인구의 소득점유율로 나눈 값인 '팔마(Palma) 비율'을 통계청이 처음 공개했다. 팔마비율이 커질수록 소득 격차가 심해졌다는 뜻이다.

ⓒ 2019 Research Institute of Industry and Economy

이런 포용적 혁신을 지향해야만 단순히 세금을 지출해 일자리를 늘리지 않고 향후 세금을 낼 수 있는 일자리를 만들어 갈 수 있기 때문이다[38]. 결국 성장과 분배가 선순환 하는 거버넌스 혁신을 이루기 위해서는 성장을 위한 혁신의 안전망, 혁신에 대한 보상과 분배를 위한 사회안전망, 동반성장 틀 구축이 필요하다.

4.5. 디지털자본 경쟁력 강화와 규제 개혁 및 사회제도적 자본 확충

4차 산업혁명 시기에 한국 경제가 추구해야 할 혁신의 가장 기본적인 과제는 모든 산업 생산 과정을 강도 높게 디지털화하는 일이다. 생산 과정 디지털화는 금융회사를 포함한 기업 생산 과정에서 기존 기술을 최신 정보기술(IT)로 대체하거나 보완해 생산성을 획기적으로 제고하는 것을 말한다. 이 방향의 기술 혁신은 오늘날 한국 대기업, 중기업 및 소기업(자영업자 포함) 모두에 강력하게 요구되는 핵심과제다.

디지털화를 통한 한국 기업 기술 혁신을 위해서는 첫째, 부설 연구소를 두고 있는 기업은 이들 연구소 중심으로 디지털화를 위한 연구개발(R&D)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 동시에 부설 연구소가 없는 모든 기업은 국책 연구기관 및 대학 연구기관과 자매결연 등 체계적인 협력관계를 구축해(멤버십 산학협력 R&D센터 등) 디지털화를 위한 연구개발을 실질적으로 추진하도록 해야 한다. 둘째, 금융회사들이 개별 기업, 특히 중기업과 소기업에 디지털화를 위한 소요자금을 저리로 공급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셋째, 대기업과 중기업 및 소기업의 디지털화와 관련된 모든 행정절차를 신고제로 전환해야 할 것이다. 정부는 기업들의 생산과정 혁신을 위한 '기업 디지털화 종합지원시스템'을 구체적으로 마련해 강력히 집행해나가야 할 것이다.

물론 기업 생산 과정 디지털화는 일자리를 줄일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 그러나 이는 디지털화라는 환경 변화에 맞춰 근로자의 직업능력을 높이는 훈련을 제공하고 구직자와 구인자를 연결하는 사회적 기능을 강화함으로써 해결해야 한다. 이로써 해결되지 않는 고용 감소는 '포용'을 위한 재분배정책으로 대응해야 할 것이다.

생산과정 디지털화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또 하나의 핵심 과제는 고용구조 혁신이다. 한국 기업의 고용구조는 비정규직 비중이 너무 높고 정규직의 고용 경직성이 너무 큰, 매우 심각한 취약성을 갖고 있다. 이를 혁신하는 것이야말로 한국 경제 혁신의 핵심과제 중 하나다. 고용 유연성을 높이지 않고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만 추진한다면, 한국 기업의 고용구조가 지나치게 경직화돼 경영 효율성이 크게 저하되고 나아가

38) 국민 부담의 또 다른 측면은 고용보험 등 사회보험 위기로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높은 최저임금한 인상 등으로 실업이 늘면서 실업급여 지출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고, 고용유지 관련 지출을 늘리면서 고용보험료 인상도 불가피해졌다. 지출이 대폭 늘어난 국민건강보험도 적자로 돌아서면서 보험료율을 또 인상해야 할 상황이다. 국민연금은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 잠재적 부채가 쌓이고 있는데도 개혁은 전혀 손대지 못하고 있다. 어떤 세금보다도 부담이 훨씬 큰 사회보험료율의 대폭적 인상은 이미 예정돼 있다고 봐야 한다.

ⓒ 2019 Research Institute of Industry and Economy

경제 성장과 발전에 큰 장애요인으로 등장하게 될 것이다.

노사정 대타협기구의 타협과 조정 기능이 실질적으로 가동되어야 할 것이다. 노동계와 기업계, 정부가 함께 한국 경제 고용 혁신을 위한 태스크포스가 작동될 수 있도록 협력하지 않는다면 생산과정 혁신도 한계에 봉착할 것이다. 대타협기구를 통해 실현 가능하면서 획기적 성과를 거둘 수 있는 기업 고용혁신 방안을 만들어 노사정 합의 하에 착실히 추진해나가는 일이야말로 한국 경제 혁신의 필수조건이다.

여기에 기업활력법을 적극 활용해 기업투자의 무게중심을 고성장이 예상되는 신기술·신산업 부문으로 신속히 이동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할 것이다. 그래야만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구조조정 여파를 최소화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양산업의 고부가가치화를 도모하고 신산업을 발굴할 수 있는 새로운 산업구조 모델 정립을 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고부가가치화와 신산업 발굴에 충분한 투자확대가 이루어져야 산업공백 유발을 방어할 수 있기 때문이다.

말하자면 정부주도 단기 일자리 창출 정책과 같은 실질적인 생산성증대로 연결되지 못하는 전략으로부터 내생적-혁신적 성장전략으로 정책 방향을 확실히 전환시켜 기존 성장전략을 산업혁신 궤도로 강력히 재편해야 한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경제주체들 모두가 시대 요구에 맞게, 그리고 한국 경제 필요에 맞게 혁신돼야만 기술 혁신과 고용 혁신, 관리 혁신 등이 제대로 성과를 거두게 될 것이다. 현재 사회는 자본과 기술이 경쟁력의 원천이 되는 산업사회에서 지식력이 경쟁력 원천이 되는 지식사회로 이행하고 있다. 지식력이란 정보를 이용해 새로운 것을 창출해내는 능력을 말한다. 국가적으로 교육혁신이 절실하고 시급한 것도 이런 맥락에서 핵심 개혁과제라 할 수 있을 것이다[39].

정부 입장에서는 규제 샌드박스[40]를 통해 신기술·신서비스에 대한 임시허가를 받더라도 본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별도로 법과 제도 개선이 필요한 점이 가장 시급히 풀어야 할 과제다. 해당 규제의 구체화 방안이 명확하지 않아 리스크를 덜기 위한 보완장치가 필요하다는 의미다. 기업 담당자 입장에서는 샌드박스에서 긍정적인 결과가 나와도 임시허가 승인이나 규제허용이 보장돼 있지 않아 사업화 시점이 돼서 다른 논리

39) 4차 산업혁명이 주도해 가는 세계경제에서 교육관련 한국 현실에 대한 우려가 매우 크다. 서울대 학생조차 안정적인 공무원을 선호하는 상황에서 주요 경쟁국과 경쟁이 가능한가? 더욱이 수십 년 전에 짜인 학과와 전공의 틀이 아직도 그대로다. 극심한 글로벌 경쟁 환경에서 창업에 도전해야 할 학생들이 기성세대 기득권에 가로막혀 있는 게 현실이다.

40) 기존 법체계에서는 발이 묶여 한 발짝도 못 나갈 경우, 우선 기술개발과 사업화를 추진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고, 그 사이 법령을 정비하겠다는 취지의 제도. 그중 시행령이 만들어진 정보통신융합법과 산업융합촉진법이 2019년 1월에 발효된데 이어 4월초에는 금융혁신법도 시행되고 금융샌드박스도 지정되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가 2019년 1월부터 시행 중인 규제 샌드박스도 박근혜 정부의 신속 처리 및 임시허가 제도와 똑같은 허점이 있다. 규제 샌드박스는 임시허가 유효기간을 최장 2년에서 4년으로 확대했다. 법으로 금지된 신기술·신서비스인 경우 테스트 기간 중 규제를 면제(실증특례)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지금까지 규제 샌드박스로는 임시허가 8건, 실증특례 9건이 부여됐다. 맹점은 본 허가를 위한 담당 공무원의 법적 근거 마련 의무가 없다는 것이다.

ⓒ 2019 Research Institute of Industry and Economy

로 반대하면 막대한 기업 R&D투자가 무용지물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담당부처 간 조정협력시스템은 말할 것도 없고 신사업이 성공할 수 있도록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부연하면, 정부가 규제를 푼다는 것이 법이나 시행령 같은 상위법령에 초점을 맞추지만 실제 기업이 혁신을 추진할 경우 부닥치게 되는 것은 시행규칙이나 각종 조례 등의 하위 법령이므다. 문제는 이를 모두 개혁하려면 공무원들에게 그럴 만한 힘이 실려야 하는데 지금은 책임소재부터 따지다 보니 어떤 공무원도 시도하지 않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는 규제 샌드박스가 희망고문이 된다는 설명이다. 규제 샌드박스가 활성화되려면 규제 개혁 공무원에게 면책특권을 줘야 창의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가능해진다"고 강조했다. 이는 정보통신산업이든 핀테크 산업이든 마찬가지일 것이다.

결국 모든 경제 주체가 범국가적 차원에서 신뢰와 정직과 같은 사회적 자본을 강화시키면서 경제 혁신을 추진해나가느냐의 여부가 '고소득 중진국 함정'에서 벗어날 수 있는가 여부를 좌우할 것이 명확한 상황이다.

5. 함의와 시사점

지금까지 중진국함정을 유발하는 핵심적 요인들을 선행연구를 통해 살펴본 후 이들 요인들이 한국경제 장기 저성장 추세에서도 유효하게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 한국경제 저성장 장기화의 모습 속에 중진국 함정의 이유로 적시되었던 핵심 요소들이 거의 그대로 투영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는 한국경제가 구조적 장기 침체(Secular Stagnation) 국면에서 벗어나 선진국으로 명실상부하게 진입하느냐 아니면 중진국 상태로 오랫동안 머물 것인지 중대한 기로에 처해 있음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다.

문헌 연구의 여러 한계에도 불구하고 중진국함정 논의는 2010년대 이후 한국경제 저성장 구조를 설명하는데도 상당히 의미 있는 시사점을 제공하는 한편, 정책적 측면에서도 한국경제가 왜 구조 전환점에 서 있으며 성장패러다임 전환이 왜 시급한지에 대한 유용한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 점을 감안할 경우 '포용-공정-혁신'을 강조하는 정부 경제정책 3대 기조와 방향은 비교적 잘 설정되었다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혁신을 통해 성장과 발전이 이뤄져야 우리 사회가 재분배 등을 통해 취약계층을 실효성 있게 포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포용과 공정을 어떻게 혁신과 조화시킬 것인가의 이행문제가 만만치 않다는 점일 것이다.

이는 앞서 살펴본 것처럼 6가지 함정 요인들 중 2019년 2/4 분기까지 어느 것 하나 뚜렷한 개선 증거가 아직은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단적으로 드러난다. 오히려 '포용-공정-혁신' 기조 하의 구조대전환을 감당하기 어려운 한국 정부가 일정 수준의

 ⓒ 2019 Research Institute of Industry and Economy

성장률 지지를 위해 정부지출 증대와 효과가 불분명한 최저임금 인상에 우선 의존하는 한편 적극적 산업구조 전환의 장기적 청사진을 아직 세우지 못하고 있어 우려가 커지고 있다.

당연한 우려이지만 개혁의 방향과 속도가 적절하지 못할 경우 더 큰 정부실패를 낳게 되어 고소득 중진국 함정 탈출이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 그 결과 상시적인 사회불안정에 시달려야 할지도 모를 일이다. 따라서 그동안 등한시해 온 각종 정치-경제-사회 개혁의 제 과제에 대해 장기적으로 정책적 미세조정까지 감안한 효율적 대응책을 세우는 것만이 한국경제가 고소득 중진국 함정에서 빠져 나올 유일한 대안인 것이다.

TFP 개선, 신 인구보너스 창출, 부채해소 및 관리, 소득불평등 완화, 조세개혁, 부정부패 척결, 교육의 질적 개선, 노사갈등 해소, 환경오염 방지, 각종 제도적 인프라 개혁 등 중진국 함정 발생요인을 제거해 가는 것이 왜 중요한지를 밝히고 있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의의가 있는 것이다.

무엇보다 최우선적으로 제조업 전반에 대한 해결책을 강구할 '제조업 르네상스 대책'을 마련해 전통 제조업 구조조정 방안과 신산업 육성대책을 총괄해 나갈 중장기 청사진 제시와 이에 대한 노사정 경제 주체들의 실천합의가 절실한 변곡점에 와 있다. 다시 말해 혁신을 앞세우고 이를 보완할 수 있도록 포용과 공정 관련 정책을 정밀하게 병행해 나가는 것만이 유일한 대안으로 판단된다.

사실 중진국 함정론에서 강조한 요인들이 한국 저성장에 그대로 투영되게 된 것은 1997년 외환위기 극복과정에서 구조적 문제점들을 혁신해 새로운 성장모형으로 진화해 가지 못한 채 중국 경제의 폭발적 성장에 기대 기존 성장모형에 안주한 결과로 판단된다. 즉 제조업과 대기업 중심 산업구조를 유지한 채 중국에 너무 의존했고 경제 환경 변화에 미온적으로 대응한 것이 저성장 함정의 핵심적 원인일 것이다.

따라서 저생산성, 저출산, 고령화, 노동시장 경직성 등 거시적 문제에 대한 실효성 있는 정책뿐만 아니라 제조업 중심, 대기업 중심이란 구조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정책대안들이 제시돼야 할 것이다. 특히 4차 산업혁명이란 메가트렌드를 고려한 대안제시가 이뤄져야 한다.

단적인 사례로 서비스업은 국내총생산(GDP)의 60%, 고용의 70%를 담당하지만 아직도 음식점, 숙박 등 저부가가치 서비스업 비중이 높은 편이다. 디지털 자본 확충에 근거해 지식정보 기반 서비스 등 고부가가치 서비스업 중심 성장이 가능하다면 저성장에서 벗어날 수 있는 동력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정보통신기술(ICT)을 기반으로 하는 서비스업 및 제조업에 성장 무게중심을 두면서 혁신을 진행해 가야 할 것이다. 향후 한국 경제 성장을 위해서는 ICT 기반 제조업과 서비스 산업에 대한 선택과 집중 정책 이외 다른 대안은 없을 것이라고 단언할 수 있다. 왜냐하면 ICT 기반 제조업과 서비스 산업에의 집중만이 4차 산업혁명

ⓒ 2019 Research Institute of Industry and Economy

물결에 선도적으로 올라탈 수 있는 핵심 방안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런 새로운 경제성장 모델이 제대로 추진되려면 기업, 정부, 정치권의 노력과 협력이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이런 점에서 혁신 성장 청사진이 절실히 요청되는 상황에 처해 있다. 결국 장기적인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이 필요한 것이다. 교육·구조 개혁과 산업 혁신과 디지털자본 확충 등 소득주도 성장론[41]이 놓치고 있는 공백을 채울 수 있는 구체적인 정책 대안이 필요하다는 의미다.

이런 점에서 중진국 함정을 탈피한 국가들 모두가 높은 총요소생산성을 유지하고 있다는 공통점에 주목해야 할 것이다. 결국 총요소생산성 핵심 결정 요인들의 우선순위를 파악해 이들 요인의 활성화를 위한 시장친화적 정책 지원을 강하게 추진해 가는 것만이 고소득 중진국 함정과 구조적 저성장에서 벗어날 수 있는 해법이 될 것이다.

41) 소득주도 성장의 핵심은 복지를 통한 재분배와 이를 통한 소득 확충이다. 중하위 계층 소득을 끌어올려 소비 증가→생산 확대→투자 증가→일자리 확대→소득 증가의 선순환 성장을 이루겠다는 취지다. 최저임금 인상, 건강보험료 보장성 강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기초연금 인상 등 새 정부가 내놓은 정책도 모두 이런 구도를 노렸다. 하지만 기업 일자리 창출 유도라는 정공법 대신 일회성 현금 수당, 즉 세금을 지출하는 고용대책을 통한 임시방편의 단기적 대책에 매몰되어 있다는 비판에 직면해 있다.

ⓒ 2019 Research Institute of Industry and Economy

참 고 문 헌

강종구. (2017a). “가계부채가 소비와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 유량효과와 저량효과 분석”, <BOK 경제연구(제2017-1호)>, 한국은행.

강종구. (2017b). “인구고령화에 따른 한국 산업구조 변화”, <BOK 경제연구(제2017-28호>, 한국은행.

강준모, 김정언, 이시직. (2017). “4차 산업혁명과 규제개혁” <KISDI Premium Report 17-13>,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권규효. (2019).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우리 경제의 성장률 둔화와 장기전망”, <현안분석> KDI(2019/5/16)

김경필. (2017). “한국은 IT강국? SW는 우물 안 개구리였다”, 7월 20일자 조선비즈(2017/7/20).

김낙년. (2013). "한국의 소득분배", Working Paper 2013-06, 낙성대경제연구소.

김낙년, 김종일. (2013). “한국소득분배 지표의 재검토”, 『한국경제의 분석』 제19권 제2호, pp, 1-50, 한국금융연구원.

김도완, 한진현, 이은경. (2017). “성장잠재력 하락요인 분석: 생산효율성을 중심으로”, <조사통계월보>, 통권 821호(71권 4호, 2017/05/08), pp.16-35.

김동열 외. (2015). “한국경제의 중진국 함정 탈출 전략: 4만 달러 도약에 성공한 9개국의 7가지 공통점”, <경제주평>, 통권 525호(2015.02.15), 현대경제연구원.

김원규, 황원식. (2017). “저출산·고령화 시대 산업정책적 대응 강화 필요”, <i-Kiet 산업경제이슈>, 제15호(2017/4/24), 산업연구원.

김의동. (2016). “중국의 저성장과 ‘중진국 함정론’에 근거한 위기요인 분석”, 『국제지역연구』 제20권 제2호, pp, 113-140, 국제지역학회.

김일규. (2019). “규제 필요성 증명하라 했더니..... 31%가 폐지·개선”, A4면, 한국경제신문(2019/3/28)

김정균. (2017). “EU 주요국의 4차 산업혁명 대응정책과 혁신 네트워크 구축 현황”, <Trade Brief Vol.22(2017/07/12)>,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

김정식. (2015). “제도선택과 한국경제의 발전 전략”, 『경제학연구』, 한국경제학회, 제63집 제1호, pp.5-31.

남기업. (2018). “부동산 투기는 어떻게 한국을 망치고 있는가 : 불평등과 비효율의 주범인 부동산과 문재인 정부”, http://www.pressian.com/news. (2018/12/22),

ⓒ 2019 Research Institute of Industry and Economy

박명호. (2016). “소득세 신고자료를 활용한 최상위 소득계층의 소득집중도 추정”, 『한국경제포럼』 제 9권 제2호 pp.55-77.

송호신, 허준영. (2017). “인구구조 변화와 재정”, <BOK 경제연구(제2017-29호>, 한국은행.

서유진. (2019). “회색 코뿔소 물리칠 한국경제 세 가지 화살은..”, 중앙일보(경제2면, 2019/3/28)).

문재용. (2019). “前정권때 양극화 커졌다더니…소득분배지표 되레 개선됐네”, 한국경제신문(2019/04/12) A4면. ㅊㅊ

윤우진. (2017). “수출 빅데이터를 이용한 한국 산업경쟁력 평가”, <i-KIET 산업경제이슈>, 제13호(2017.3.17.), 산업연구원.

이근태, 이지선. (2017). “생산가능인구 감소 시대의 경제성장과 노동시장”, LG경제연구원.

이부형, 박용정. (2017). “한국경제, 일본을 얼마나 따라 잡았나: 한일 비교를 통해 본 한국경제의 나아갈 방향”, <경제주평 17-12>, 173호(2017.03.24.), 현대경제연구원.

이승호. (2016). “국내 금융권 자금흐름의 특징 및 변동요인 분석”, KCMI 연구보고서 16-06, 자본시장연구원, pp.26-29.

이태훈. (2019). “이종태(퍼시스 회장)의 ‘사이다 발언’ 1774개 규제 풀었다”, A1면, A4면, 한국경제신문(2019/3/28)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 산업분석팀. (2017). “IT 시가총액 동향”, 정보통신기획평가원(2017/3/13), https://www.iitp.kr/main.it.

정조원, 오영경. (2019). “제조업 생산성 및 단위노동비용 국제비교”, 한국경제연구원.

조대형. (2017). “지표로 보는 이슈(2017/7/20)”, 국회입법조사처.

조윤제, 박창귀, 강종구. (2012). 『한국의 경제성장과 사회지표의 변화』, 한국은행.

주원. (2016). “성장요인 분해를 통해 본 최근 한국경제의 특징: 한국경제, 조로화-저성장 함정에서 탈출이 시급하다”, <경제주평> 통권707호(2016.08.26.), 현대경제연구원.

주원, 김천구. (2016). “국내 잠재성장률 추이 및 전망: 잠재성장률 2016년 이후 2%대 진입”, <경제주평> 통권676호(2016.01.22.), 현대경제연구원.

최남석. (2015). “한국 정보통신기기산업의 한·중·일 국제경쟁력 비교 및 정책제언”, 한국연구원(KERI), 정책연구 15-15(2015/08)

최영준, 박헌용, 박정훈. (2016). “국내 SW산업의 경쟁력 국제비교 연구”, <방송통신정책

 ⓒ 2019 Research Institute of Industry and Economy

연구 15-진흥-067>, 미래창조과학부.c

최제민, 김성현, 박상연. (2018).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한국의 소득불평등 변화에 관한 연구”, 『경제학 연구』, 한국경제학회, pp.115-142.

한국경제연구원. (2019). “성장률을 높이기 위한 노동생산성 증가대책 필요”, 보도자료 (2019/3/26)(http://www.keri.org).

한성우. (2016). “위기의 한국경제, 마이너스 경제지표 증가: 한국경제 드리워진 마이너스 그림자”, 전경련.

황선재. (2015). “불평등과 사회적 위험: 건강, 사회문제 지수를 중심으로”, 『보건사회연구』 35(1), pp.5-25, 한국보건사회연구원.

Agenor, Pierre-Richard. and Baris, Alpaslan. (2014). “Infrasturucture and Industrial Development with Endogenous Skill Acquisition”, Working Paper No. 195, Center for Growth and Business Cycle Research(October).

Brown James, R., Gustav Martinsson and Bruce, C. Peterson. (2012). “Do Financing Constraints Matter for R&D?”, European Economic Review, 56(November), pp.1512-1529.

Czernich Nina., Oliver Falck., Tobias Kretschmer. and Ludger Woessman. (2011). “Broad Band Infrastructure and Economic Growth”, Economic Journal, 121(May), pp.505-532.

Dabla Norris., Era Alun Thomas., Rodrigo Garcia-Verdu., and Yingyuan Chen. (2013). “Benchmarking Stuructural Transformation across the World”, Working Paper No.13/176, IMF(July).

Daude Christian. (2010). “Innovation, Productivity and Economic Development in Latin America and the Caribbean,” Working Paper, No.288, OECD Development Center.

Edda Zoli. (2017). “Korea’s Challenges Ahead-Lessons from Japan’s Experience”, Working Paper(WP/17/2), IMF.

Egawa Akio. (2013). “Will Income Inequality cause a Middle-Income Trap in Asia?”, Working Paper No.2013/06, Bruegel(October).

Eichengreen Barry., Donghyun Park., and Kwangho Shin. (2012). “When Fast Economies Slowdown: International Evidence and Implications for China”, Asian Economic Papers, 11(March), pp.42-87.

Enam Ahmed etc. (2017). “Ageing-passing the baton to Asia”, <Global Research:

ⓒ 2019 Research Institute of Industry and Economy

Special Report>, Standard Chartered Bank.

Felipe Jesus., Arnelyn Abdon. and Utsav Kumar. (2012). “Tracking the Middle-Income Trap: What is it, Who in in it, and Why?,” Working Paper No.715, Levy Economics Institute of Bard College.

IMF. (2017). “Regional Economic Outlook: Asia and Pacific Preparing for Choppy Seas”, World Economic and Financial Surveys(April), IMF.

Jacques Bughin. and James Manyika. (2013). “Measuring the full impact of digital capital”, Mackinsey Quarterly, July.

OECD. (2015). “OECD Better Life Index”, OECD. http://www.oecdbetterlifeindex.org/#/11111111111

OECD. (2016a). “OECD Compendium of Productivity Indicators 2016”, OECD.

OECD. (2016b). “OECD Economic Survey: Korea”, OECD.

OECD. (2016c). “Economic Policy Reforms 2016: Going for Growth Interim Report”, OECD.

Rodrik, D., Subramanian, A. and Trebbi, F. (2004). “Institutions Rule: The Primacy of Institutions over Geography and Integration in Economic Development”, Journal of Economic Growth, Vol.9, No.2, pp.131-164.

World Bank. (2012). China 2030: Building a Modern, Harmonious, and Creative High-Income Society, World Bank(Washington DC).

 ⓒ 2019 Research Institute of Industry and Economy